

## 도라산 고속도로 '임기내 착공' 강행하나

국토부 주민설명회 세번째 '공고' 강행 ... 청와대 "임기 안에 착공할 사업 아니다"

2021-01-12 11:29:38 게재

코로나19가 여전히 위험스런 상황인데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도로공사와 파주시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1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열겠다고 세번째 공고를 했다. 이는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17일까지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 노현기 집행위원장은 "나이 드신 임진강 어부 등 생존권에 직결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코로나 와중에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건 국민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곳곳에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4.27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핵심사업으로서 남북협력의 실질적 상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조기 추진이 필요"(사업의 개요)

"서울~개성을 고속도로로 연결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 촉진 및 평화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남북연결 도로사업 중 최우선으로 추진되는 문산~개성간 고속도로의 남측 구간인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하고"(사업의 목적)

◆'노선변경시 임기내 착공 어렵다' = 이에 앞서 2020년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환경부가 협의의견으로 제시한 '동측노선(통일대교쪽) 검토'나 '임진강 하저터널 검토' 등 조건부동의를 지키지 못하겠다는 매우 이례적인 내용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이 사업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다른 노선을 검토할 경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임기내 착공이 어렵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도 장단반도를 관통하는 기존 계획노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태다.

"본 사업은 DMZ와 근접 통과하나 법정보호종 서식 여건은 유사하고, 경제성 및 안정성, 생활환경과의 조화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남북협력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노선 변경이 곤란하여 계획노선으로 추진하겠음"(협의내용 반영 여부)

◆청와대는 '압박한 일 없다' = 임진강대책위와 파주어촌계 등은 "이는 결국 주민 의견수렴이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은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현 계획노선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이 사업은 청와대가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며,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임기내 착공이라고 못 박을 수도 없다"며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서 대안들을 검토해본 결과 똑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기존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주민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가 관여하거나 임기 안에 착공해야 한다고 압박하거나 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준기 구본홍 기자 [namu@naeil.com](mailto:namu@naeil.com)



(주)내일신문 | 대표 장명국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1953 등록일자 : 2018.12.06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13층(순화동, KG Tower) ☎ 02-2287-2300  
웹사이트 운영대행사 : (주)내일이비즈 01-86-52538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